

전문가 요청

공익신고와 윤리경영 문화 확산



이 상 범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

질문 1 공익신고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와 더불어 위해식품의 유통, 부실공사, 오염물질 배출 등 민간의

공익침해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보자'는 한때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줄기세포 조작 스캔들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줄기세포 배양에 실패했음에도 성공한 것처럼 세상을 속였던 사건인데, 실제 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의 공익신고로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만약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익신고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행해지는 공익침해행위를 찾아냄으로써, 더 큰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공익침해 예방과 부패방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영국은 1998년에 공익신고법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미국도 부정청구법, 연방공직신고자 보호법 등 다양한 개별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그 동안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분야의 공익신고자까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 2 공익신고에 대해 기업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자도 공익신고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공익신고기관으로 정한 이유는 기업에 자율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인이 기업의 공익침해행위를 기업 외부에 신고하게 되면, 기업은 벌금, 과태료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한 비금전적 손실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에 신고했을 경우, 기업 스스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부신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 건강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도 기여합니다.

즉, 기업이 공익신고 처리기능을 갖추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공익신고 처리기능을 갖추으로써 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공익신고 처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 하반기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 대상 공익신고 교육과 홍보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권익위의 활동을 적극 활용한다면,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향 & 소식

:: 국내

산업정책연구원, 기업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은 국내 산업계 지속가능경영 도입 수준을 진단하고 인식확산과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핵심평가 160개 기업, 심화평가 75개 기업)했다. 14년도 조사결과,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87.68점으로 전년대비 0.52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지속가능경영 비전(93.86점), 윤리경영(93.48점), 환경경영(90.91점), 고객(89.75점), 작업장(88.78점), 지배구조(86.25점), 협력업체(83.99점), 지역사회(73.53점) 순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는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8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개별 신청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2015년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31/0200000000AKR20150731092400848.HTML?input=1195m>

경제개혁연대 "임원보수 결정 기준 여전히 불투명"

지난해 3월 사상 처음으로 임원 보수가 공개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은 아직까지도 베일에 싸여 있으며, 기업의 반발로 공개 횟수도 줄었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임원 보수지급에 의문이 있는 국내 대기업 10개사에 대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질의 회신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몇몇 대기업들은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를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임원 보수 지급이 중요 경영정보 또는 사적인 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159조에는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75032>

경기도 생협 10개 매장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경기도는 도내 생협 매장 10곳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숍인숍(shop in shop)'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를 넓혀주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는 따복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품평회를 열고, 참가한 도내 30여개 사회적경제기업 가운데 10개 기업, 25개 제품을 최종숍인숍 입점상품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이 윤리적 생산과 소비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생협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1908423444199>

:: 해외

Ethical Corporation, 'State of Sustainability 2015' 조사 결과 발표

윤리경영매거진인 Ethical Corporation지가 'State of Sustainability 2015'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세계 기업, 비영리기구 및 정부 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는 자신의 CEO가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9%만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기업의 방향성, 문화에 있어 CEO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출처: Ethical Corporation, Best of 2015.

노르웨이 국부펀드, 국내 환경파괴 기업에 투자 중단

8,700억달러(1,031조 369억원)의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가 환경파괴를 이유로 국내 B기업과 모기업인 A 기업에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GPFG는 B사가 인도네시아 아열대 산림에서 진행하고 있는 팜오일 농장 개발 사업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생태보전이라는 윤리적 차원에서 앞으로 두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GPFG는 지금까지 50여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무기생산 등을 이유로 투자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GPFG는 지난해 말 기준 A사 지분 0.9%와 B사 지분 0.3%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 <http://economy.hankooki.com/page/stock/201508/e2015081908521247830.htm>

미국, 상장기업 CEO-종업원 임금격차 공개 의무화

미국에서 상장기업의 CEO와 종업원의 임금 격차 정도를 재무제표처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표결을 통해 CEO의 임금이 종업원 평균 임금의 몇 배인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찬성 3, 반대 2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해 소기업이나 신성장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상장회사는 2017년 1월 이후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부터 임금 격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id2=262&oid=018&aid=0003301140>

기업윤리
브리프

2015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시상



한국경제매거진이 주최한 '2015 윤리경영 대상' 시상식이 7월 30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2007년 제정된 윤리경영 대상은 이윤 창출 외에 기업과 연관된 지역사회, 임직원, 고객 등에 대하여 윤리경영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기업을 찾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국남동발전, 부산시설공단, 엔젤메디칼, 더휴앤컴퍼니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글로벌 리포트

세계 주요 국가의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률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I) 호주지부는 세계 각국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법에 대해 법 적용 대상자, 적용 법률, 보호범위 등의 14개 원칙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여기서는 해당 보고서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미국의 법과 가장 진전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손꼽히는 영국의 법, 그리고 일본의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은 정부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고한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여 연방정부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1989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퇴직자 및 공무원 지원자를 포함한 미 연방정부공무원 대부분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 법은 기존의 허점을 보완하고 법률 적용 부패행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2012년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공직자에 의한 내부신고는 2007년 482건에서 2012년 1,14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도드-프랭크법 (Dodd-Frank Act)

금융시스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증권거래 관련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신고주체를 내부신고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2013년 미국 증권거래소는 내부신고자에게 총 1,400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증권거래소를 통해 6,573건의 내부신고가 이루어졌다.

영국

공익신고법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PIDA)

영국정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 보복행위에 대해 소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8년 공익신고법(PIDA)을 도입했다. PIDA는

가장 진전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자 다른 국가의 관련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죄행위, 법률위반행위,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의 위협, 근무환경의 침해 및 이에 대한 고의적 은폐 등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현직 (파견)근로자, 계약체결자, 현장실습 또는 직무훈련자가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법은 단계적 신고제도를 통해 소속기관, 규제당국, 외부공개로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우선적으로 기업내부에서의 문제해결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외부공개 경우 다음의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TI 호주지부 보고서에서 영국의 PIDA는 최하점인 3점을 받은 익명성, 내부공개절차, 감독당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원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외부공개 4가지 조건

- 내부신고자가 소속기관이나 규제당국에 신고할 경우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
- 규제당국이 없고 증거들이 은닉되거나 파괴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
- 내부공개가 이미 이루어졌을 경우
- 내부 신고사항이 예외적으로 아주 중요할 경우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公益通報者 保護法)

2002년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식품 원산지 위장표시' 등의 범죄 사건이 내부 근로자의 신고에 의해 외부로 드러나자 공익통보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4년 일본정부는 근로자가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공익통보자보호법은 공익통보 및 공익통보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통보자 · 사업자 · 행정기관의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 행정기관 직원 등을 신고적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명과 신체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공정한 경쟁의 확보와 관련된 450여개 법률위반행위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신고대상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신고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신고자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어 일부에서는 공익신고를 오히려 억제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윤리경영 스터디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소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에 핵심역할을 하며 사회 전반에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중요한 경영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UN Global Compact(UNGC)는 'Guide to Corporate Sustainability'를 통해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다.

1. 글로벌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

UNGC 10대 원칙은 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60개국 8천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UNGC 10대 원칙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4면에서 계속됩니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제약업계

제약업계는 그간 리베이트, 생동성 시험 결과 조작, 변질 및 불량 의약품 제조 등 각종 비윤리적인 스캔들로 어려움으로 겪었다. 그 결과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고, 제약업체들은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슈 1 리베이트 처벌 받았던 기업들의 변모 >

리베이트 지급 문제로 인해 많은 제약업체가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매스컴에 보도되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브랜드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매출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제약업체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윤리경영 제도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개선에 나섰다.

사례 리베이트 처벌 대상에서 대통령상 표창 수상으로

국내 제약업체인 A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의사들에게 음악회 관람비용 등 약 2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 당시 담당 임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이 업체는 직원교육과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CP) 도입 등을 통해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나섰다. A사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2014년 CP 우수성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5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A사는 CP 전파 확산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제14회 공정거래의 날에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슈 2 협회를 통한 공동의 노력 >

제약 리베이트의 경우 제약 기업이 다 함께 리베이트 관행을 따르지

않다면 업계 전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한 기업이 이에 동참하지 않고 리베이트를 할 경우 다른 기업도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협회차원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리강령과 헌장을 제정하여 기업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부당 거래를 추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윤리경영을 자율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윤리경영 자율진단 지표는 기업 내에 윤리경영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는지를 기업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도구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업에 윤리경영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사내 윤리경영 관련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례 제약업계 윤리경영 아카데미

한국제약협회가 한국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KRPIA)와 손잡고 지난 5월 22일 '제1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한 약무정책 동향' 발표와 다양한 사례연구, 사례별 투표, 모의재판 등으로 구성됐다. 제약협회와 KRPIA는 이번 윤리경영 아카데미가 국내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되고, 보완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등 실효성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 협회는 하반기에도 아카데미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3면에서 이어집니다.

2. 사회에 공헌

기업이 속한 사회의 발전은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현재 점차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기업이 속한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 전략적인 사회공헌

다른 기업의 사회공헌방법을 따라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업 자신만의 핵심역량을 살려서 사회적으로나 기업 스스로에게나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 파트너십

기업, 투자자, 정부, 국제기구 등 주요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통해 더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으며, 자원을 절약하고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다.

3. 경영진의 노력 (Leadership Commitment)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은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지속가능성이 우선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 이사회

이사회를 통해 기업의 장기목표와 이를 위한 전략이 수립되는 만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 공급망

UNGC 참여자들은 기업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하청업체 등의 공급망을 참여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뽑았다.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 원칙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공급업체들이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공급자와의 문서에 공급업체들이 지속가능성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	공급업체에 교육훈련을 제공
83%	60%	17%

4.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행보고서 작성 (Reporting Progress)

비재무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이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5. 지역사회에 참여 (Local Action)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는 기업 지속가능성의 바탕이 된다. 기업은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연결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16년 1월 시행). 이로 인해 공익신고대상 법률이 확대됨은 물론, 내부 공익신고자보호가 강화되었으며 보상금제도 개선 등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공익신고대상 법률 확대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를 위해 공익신고 대상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을 포함시키고, 국민 다수와 관련되거나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추가하는 등 총 99개의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에 신규로 추가하였다(기존 180개 → 279개).

구 분	주요 법률
국민 다수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률(52개)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도선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17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행위가 은밀하여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27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신고는 되었으나, 적용대상 법률에 미포함된 법률(3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 당시에 불법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를 일반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믿고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불이익 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공익침해행위가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보호조치가 가능했던 것을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 실효성 강화장치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보호조치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의 감면 외에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 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 '2천만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 가능

○ 보상금제도 개선 및 포상금제도 신설

파파라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 서민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금(행정처분액의 4~20%)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보상금과 포상금 비교

구 분	보상금	포상금 (신설)
요 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 급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처분액의 4~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위원회의 재량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대 상	내부 공익신고자	내부·외부 공익신고자

9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 윤리경영과 부패리스크 관리를 위한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 컨퍼런스

뇌물 관련 법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경영환경 속에서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표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주최 : BSI Group Korea, UNGC, 영국 외무성
- 일시 : 2015년 9월 15일(화)
- 장소 : 주한 영국 대사관 Aston 홀

|| UN과 함께하는 해외진출기업 CSR 포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에게 UN 등 국제사회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CSR의 내용과 동향을 소개하며, 기업들이 현지에서 지속가능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최 : UNGC 한국협회
- 일시 : 2015년 9월 7일(월)
-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Ritz Carlton 호텔

국민권익위원회 KakaoTalk 플러스친구

국민권익위원회와 친구하면 카톡 이모티콘을 드려요!

권익위 플러스친구 추가 시 귀여운 "호로몬"이모티콘 12종 선착순 10만 명 지급

카톡 > 더보기 > 플러스친구
"국민권익위원회"를 검색하세요

플러스친구 찾기 > <http://go.kakao.com/@국민권익위원회>



자료제공 : 롯데백화점

맛 추 보 세 요

다음 보기 중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법은 무엇일까요?

- 1)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 2)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 3) 공익신고자 보호법
- 4) 연방공직신고자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 (커피 2잔)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4번, 공동구매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용(gukmin@korea.kr)
- ※ 정답과 함께 성함, 주소, 핸드폰 번호(모바일 상품권 수신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 지난 호 퀴즈 정답지는 박진희님, 양미리님, 박혜자님, 김은호님, 김희석님입니다.
- ※ 보내주신 연락처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